

2018

Report

of Trend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2. part2 제 92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산업위 법안소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3
2.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대체법안을 ' 동시추진 ' 한다는 정부 4
3.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시동 5
4. 與 , 규제프리존법 반영 ' 규제혁신 5 법 ' 추진..." 野 설득 가능 " 6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경쟁력 갉아먹는 거미줄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8
2. 2 차 공공기관 이전 9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옮겨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 균형발전 ' 절반의 성공 ' 10

1. 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2.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 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이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하고, 또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
- 아울러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파행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음
-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
 - 의사일정은 미리 합의돼야 하는데 국회 정상화가 오늘 낮 12시 가까이 돼서 결정 난 상황이고 연휴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해온 상태라 물리적으로 오늘 법안소위는 불가능한 상황
 -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할 예정

2.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대체법안을 ' 동시추진 ' 한다는 정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2.2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자신문 EtnEws

02

주요내용

■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음

- 중소기업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 지역특구법 개정안 ' 을 준비
-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의 대체 법안이나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 이런 부처 간 엇박자는 국회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
 - 정부가 규제프리존 정책을 공식 포기하면 야당 반발로 새로 마련할 대체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이 모순된 정책 '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중심으로 마련한 ' 규제프리존법 ' 과 규제프리존법의 대체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 지역특구법 개정안 ' 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
 -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 대 법안 가운데 하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용진 기재부 2 차관
 - 최근 국회에서 지역특구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혁신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국회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의한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
-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규제프리존법의 대안 성격이냐는 질문 김용진 기재부 2 차관
 - 대안이 아니라 규제프리존법 취지를 담은 새로운 법이라고 설명
 - 두 법안을 두고는 충돌되지 않는다며 동시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음
- 실제 기재부는 지난 정부 때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팀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
- 반면에 지역특구법을 운용하고 있는 중기부는 규제프리존법 대안으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발의는 국회의원 발의 예정)
-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된 '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 ' 초안 자료
 - 국민건강, 안전, 환경보호, 규제훼손, 지역 (재벌) 숙원사업 특혜 등 규제프리존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체 법안을 마련 · 추진이라는 개정 배경이 명시
 - 규제프리존법을 대신할 ' 대체 법안 ' 임을 명확히 한 것
 - 중기벤처부 관계자 :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규제프리존법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함
- 지역특구법 개정안 초안 자료만 봐도 규제프리존법과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규제프리존법의 핵심인 의료 등 분야에서의 산업 특례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서는 아예 제외
 - 국회가 2 년가량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이 부분이 원인
-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 초안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면서도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대체 법안 ' 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추진 가능한 ' 보완 · 추가 법안 ' 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함
- 기재부 관계자
 -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정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

3.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시동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8.02.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토교통부

02

주요내용

■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금년 10 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혁신도시 시즌 2』 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 월 1 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힘
-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 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
 - 국토부 1 차 관을 단장, 부단장 (고공단 ‘나’ 급) 직 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 (고공단 ‘나’ 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 개과, 총 34 명 규모로 구성

현행	개편	현행	개편
기획총괄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지원정책과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중전부동산기획과 / 혁신도시재정과	혁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상생발전과 (신설)
투자유치지원과	혁신도시산업과	대외협력과	혁신도시대외협력과

-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
- 혁신도시산업과는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 2』 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

구분	시즌 1 ('05.~'17.)	시즌 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 방식)	지방정부 (Bottom Up 방식)
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중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 월 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 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
- 금년 6 월까지 시 · 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0 월까지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
- 개편된 조직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4. 與, 규제프리존법 반영 ' 규제혁신 5 법 ' 추진..." 野 설득 가능 "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8.02.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02

주요내용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 법을 추진한다고 27 일 밝히고 당정이 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본격 박차를 가할 전망
 - 문재인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발표
-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법안
 - 4 대 패키지법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 등
 -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 해당 법안들은 내일 중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임
- 김태년 정책위의장
 -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5 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것
 -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 즉시 발의할 것
 -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보완조치를 설명
 -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
 - 규제혁신 5 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 (60 개) 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
- 규제혁신 5 법 내용
 -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 일 내에 회신
 - 규제 신속확인과 법령 공백 법령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
 -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임시 허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 다만 안전·환경 관리와 상충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기로 했음
- 규제특례 제한 항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를 가능하게 했음
- 다만 규제혁신 5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합의 변수가 남아있음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고수
-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식이고, 야당의 규제프리존은 지역기반 (14 개, 수도권 제외) 로 지자체에 의해 사전 결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정해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합의와 관련
 -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
 - 핵심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야당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봄

4. 與, 규제프리존법 반영 ' 규제혁신 5 법 ' 추진..." 野 설득 가능 "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8.02.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02

주요내용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 법을 추진한다고 27 일 밝히고 당정이 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본격 박차를 가할 전망
 - 문재인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발표
-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법안
 - 4 대 패키지법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 등
 -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 해당 법안들은 내일 중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임
- 김태년 정책위의장
 -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5 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것
 -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 즉시 발의할 것
 -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보완조치를 설명
 -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
 - 규제혁신 5 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 (60 개) 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
- 규제혁신 5 법 내용
 -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 일 내에 회신
 - 규제 신속확인과 법령 공백 법령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
 -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임시 허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 다만 안전·환경 관리와 상충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기로 했음
- 규제특례 제한 항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를 가능하게 했음
- 다만 규제혁신 5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합의 변수가 남아있음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고수
-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식이고, 야당의 규제프리존은 지역기반 (14 개, 수도권 제외) 로 지자체에 의해 사전 결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정해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합의와 관련
 -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
 - 핵심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야당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봄

1. 수도권 경쟁력 잡아먹는 거미줄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2.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민일보

02

주요내용

■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있어 찬성·반대 팽팽하게 대립

-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수도권규제에도 메스를 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지방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이 와중에 정부는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 19 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음
-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 지 30 여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 일각에서 수도권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이익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편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 규제 형태를 현행 입지규제에서 성능규제로 바꾸자는 주장
 - 개발제한 등으로 생산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신·증축은 허용한 뒤 오염총량 등을 관리하자는 것
- 하지만 지방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음
- 산업구조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반론
- 한국경제연구원
 - 2014 년 기준으로 수도권 공장용지 면적은 전국 공장용지 면적의 22.9%, 2008 년 24.3% 에서 떨어졌지만 낮은 수준은 아님
 - 공장등록건수 역시 2014 년 8 만 2648 건으로 전체 공장의 48.3% 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 2008 년 '10·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등 이명박정부 시절 규제완화가 일부 실시된 만큼 더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옴
-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발표 때 수도권규제 완화를 언급
- 논란이 심화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9 월 대정부질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선을 긋고 나섬
-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김동연 부총리 지난달 언론 인터뷰
 - 신산업 분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 수도권규제를 비롯해 패키지로 규제를 풀어줄 것
-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 정부 관계자 :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던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

2.2 차 공공기관 이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2.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26 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으로 효과 및 영향분석을 추진 중

- 앞서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전국에서 153 개, 도내에서만 52 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 이런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함께 (가칭)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음
- 이는 참여정부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152 개가 수도권에 위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중 122 개 (경기도 28 개, 인천시 7 개) 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 부산광역시도 소위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예산 1 억 8 천만 원을 들여 이달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을 발주하는 등 이미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맞이에 돌입
-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도에 통보나 논의조차 하지 않아 결국, 도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한 상태
- 특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당 부지의 상권이 몰락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도가 2 차 이전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논의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
 - 실제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한 뒤 남은 도내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한국예탁결제원 (고양), 대한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성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안양), 한국전력기술 (용인), 중앙 119 구조본부 (남양주) 등 7 곳의 부지는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
- 더욱이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대신 수도권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서울도’ 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남 지사의 발언과 관련, 지방에서는 가뜩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수도권이 하나로 뭉칠 경우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도권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는 상황
- 도 관계자
 -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당위성을 언급하는 등 노력해야 하지만 반대입장인 경기도는 선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
 - 2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
-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
 - 현재 앞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이전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계획
 -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 간, 지역 간, 기관별 많은 사안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

1.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2.1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파이낸셜뉴스

02

주요내용

■ 인구, 일자리 수도권 집중 ..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 지역 제조업 무너질수도

- 국토균형발전이 나온 핵심적인 이유
 -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원은 한정되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고르게 활용해야 함
 -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지방은 등한시
-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국토균형발전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자본의 수도권 유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
 - 지방에 돈이 돌면서 지역경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여전히 생산규모 측면에서 수도권은 지방을 압도
-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생산기지나 신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현재로선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국토균형발전, 절반만 성공

- 18 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는 68 조 4000 억원
- 반대로 동남권과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은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
-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낸 소득이 수도권으로 지방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의미
- 긍정적인 측면은 수도권의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가 감소 중이라는 점
- 생산의 수도권 집중이 재상승한 지난 2012 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는 90 조 5000 억원이었지만 지난 2016 년에는 68 조 4000 억원으로 줄었음
- 반대로 지방의 경우 지역소득역외유출 현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출 규모가 감소
- 예컨대 지역내총생산 (GRDP) 규모가 전국 7 대 권역중에 두번째인 동남권은 지난 2012 년부터 2016 년 까지 지역소득역외유출 규모는 18 조 9000 억원에서 14 조 2000 억원으로 줄었음
- 이 같은 현상은 대경권과 호남권, 제주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수도권 . 동남권 . 대경권 . 충청권 . 호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과거 지방에서 형성된 대규모 자본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이후부터는 수도권으로 오던 자본이 줄고 그만큼 지방에 머물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

■ 아쉬운 '반쪽 효과'

-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의 지역총소득 (GRI) 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생산기반들은 수도권에 집중
 - 2012 년과 2016 년 동안 전국 평균 GRDP 성장률은 18.8%
 - 이 기간 수도권의 경우 22.1% 로 전국 평균을 상회
 - 수도권과 함께 평균을 상회한 권역은 충청권 (23.2%) 과 강원권 (23.2%), 제주권 (33.1%)
 - 강원도에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 의한 건설투자가 활발, 제주의 경우 관광 경기 활성화가 GRDP 를 상향
 - 따라서 사실상 지방 중에서 충청권이 유일하게 생산기반 확대된 지역
 - 반대로 동남권과 대경권, 호남권의 경우 전국 평균에 한참 밑도는 10% 대의 성장률을 보였음

1.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0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는 지방의 소득은 늘었지만 지방의 생산력 확대나 경제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분석
- 서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 참여정부 이후로 지방발전과 지역발전 정책 펴왔음에도 인구와 일자리, 취업자 시계열을 보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형식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 차적인 처방으로는 부족, 지방중소도시에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

■ 정부 차원 지방지원 필요

- 수도권에 인구와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조업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을 수도권에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따라서 규제가 없다면 수도권 집중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임
- 차미숙 국토연구원 본부장
 -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봐도 교육이나 문화 등이 서울에 몰려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음
 - 집중되는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
 - 다만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
 - 더구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는 것
-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
 - 수도권에 주로 기업의 본사나 첨단산업 등이 위치해 있음
 - 반면 지방에는 주력산업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
 -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방 제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여지가 있음